

공 개



의안번호	제 357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 차)

의  
결  
사  
항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 1. 의결주문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 2. 제안이유

(주)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주)신한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4항,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2항, [별표2]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2021.4.22.) 심의필
- 제21차(11.23.)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 심의필

## <별지>

(주)신한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 1. 조치내용

#### ☐ 기관에 대한 조치

#####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1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별표2]

### 2. 조치사유

#### 가. 사모펀드 선정·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고,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 상품 선정 - 출시 - 판매 각 단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등 다음 (1)~(3)와 같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1) 사모펀드 선정·출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① 은행■■■■■은 사모펀드 선정시 소관부서인 ◇◇◇◇부가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와 집합투자계약 간 투자전략의 차이, 레버리지의 활용 가능성, 위험의 헤지를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 등 사모펀드의 투자 구조와 이에 따른 투자 위험성의 변동 가능성 등을 확인·검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부는 ☆☆ CI 펀드 선정 시점에 상품제안서와 달리 집합투자계약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펀드를 시리즈 형태(총 xx 회차)로 x개월에 걸쳐 판매하여 오는 동안 한 번도 상품제안서상 투자전략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이 변경될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채

판매보조자료에 불과한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확신하여 투자전략의 변경가능성을 PB들에게 교육·설명하지 않아 영업점의 설명의무 위반을 초래하였음

② 신한은행은 상품 최초 선정 당시 제시되었던 투자전략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운용전략의 일관성, 손실가능성·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점검 및 환류(Feedback)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sup>\*</sup>을 마련하지 아니하였고, 기 출시한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을 회차별<sup>\*\*</sup>로 출시하는 경우에도 운용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사 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추가 출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당 업무수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 \* 상품출시를 담당하는 ◆◆◆본부(◇◇◇◇부)는 상품취급 실적으로 평가받으므로 이해상충관리를 위해 상품 위험관리 업무는 별도 조직에 분장되어야 함
- \*\* 재간접 투자구조로 운용되는 ☆☆ CI 펀드는 자펀드 설정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자펀드가 모펀드의 운용수익·위험 등 운용성과를 공유하므로 자펀드를 추가 설정하기 전에 기 설정된 모펀드의 운용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자펀드 추가 설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
- ■■■■■은 20xx.x월 ☆☆ CI펀드 최초 출시 이후 xx차례에 걸쳐 취급 하면서도, 기 판매한 CI펀드의 운용전략 등을 확인하거나 추가 출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하여 운용사 투자전략의 동일성\*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투자전략이 유지된다고 단정한 채 판매직원에게 ☆☆ CI펀드가 ‘신용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안내하여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한 결과 ☆☆ CI펀드 시리즈 x~xx호 전체의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였음
  - \* 신한은행은 ☆☆펀드 신규취급 중단 이후인 20xx.x월에는 기준가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 운용의 운용상 특이사항을 인지하였으므로, 만일 신한은행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였더라면 이보다 일찍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후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투자자 설명에 보다 신중을 기하였을 것임
- 나아가, 20xx.x~x월 중 ☆☆자산운용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운용역 구속·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 운용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운용사의 위험이 구체화되던 시점에도,
 

■■■■■ 차원에서 운용사 불법 운용위험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이 은행 ■■■조직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상품담당조직인 ◆◆◆본부(◇◇◇◇부) 단독으로 계속적인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모펀드의 후속출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 부당권유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음

## (2) 상품선정·출시협의체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별표 2]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키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도,

- ①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출시 결정을 위한 「상품선정·출시협의체\*」(이하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기 선정된 상품과 동일한 자산을 기초로 한 유사한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는 상품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 ◇◇◇◇부, ◆◆◆◆전략부, ■■■사업부, ■■■컨설팅센터, ○○○센터, ●●●총괄부, ■■■■■기획실 등 x개 부서 실무자급으로 구성되어 상품출시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

심의절차 생략의 주요 요건인 ‘동일한 자산’과 ‘유사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판단근거의 기록유지 및 제3자에 의한 사후검증 절차도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xx년 취급한 사모펀드상품 xxx개 중 xx개(xx.x%), 20xx년 취급상품 xxx개 중 xxx개(xx.x%) 등 대부분 상품이 협의체 부의를 생략하여 출시되었음

- 투자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부 실무자의 독단적 판단만으로 ☆☆ CI펀드가 기 판매한 「●●● ●●●●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xx호」와 ‘동일한 자산-유사한 구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협의체의 심의 절차가 임의로 생략되었고, 이로 인해 투자전략 및 투자구조상 차이에 따른 위험을 잘못 인식한 채 20xx.x.xx. ☆☆ CI펀드가 출시되었음

- ② 은행 내규인 「수신업무기준\*」에는 ‘고위험 및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상품’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더욱 철저히 검증토록 하고 있을 뿐 협의체의 펀드선정평가표상 x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척도나 세부적인 평가지침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수신업무기준 제x편 집합투자증권 제1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 투자철학 및 전략, 운용스타일의 일관성, 운용역, 당행 투자전략과의 적합성

- 각 평가자는 ◇◇◇◇부 또는 운용사 담당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단순히 점수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심의하는 등 협의체의 운영이 실효성없이 운영되고, 협의체 구성원이 유관부서의 실무자급(과장·차장급)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검토 자료 등 참여 부서의 지원이 부족하고, ◇◇◇◇부의 의견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업무담당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 소속 평가위원과 마찬가지로 ‘투자철학, 당행 투자전략과의 적합성’ 등 영업전략 차원의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평가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일부 펀드의 경우 선정협의 당시 유관부서의 실제 참석한 직원과 회의록상 참석한 직원이 상이한 등 유관부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만 청취

③ 내규 「업무기준」에는 ◇◇◇◇부가 사모펀드 상품 출시시 협의체 합의를 생략하고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협의체에 사후보고를 해야 함에도

- 사후보고 내용·시점·방식 등 구체적인 사후보고 절차와 동 절차 위반 시 처리방법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는 ☆☆ CI 펀드를 출시 시점에 협의체의 심의를 생략하고 xx회차에 걸쳐 동일 펀드를 판매하여 오는 동안에도 사후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xx.x~x월중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대한 시장 의혹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운용사 위험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도 ♥♥♥♥♥부서 및 ♡♡♡ ♡♡부서 등의 내부건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 (3) 판매직원의 설명의무 준수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운용사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을 제안하는데 사용되는 상품 제안서\*를 법상 설명서로 대용하면서도 해당 상품제안서가 집합투자계약의 내용을 포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설명서 대용으로 교부 가능한지에 대한 ♥♥♥♥♥부서의 검토 및 ♥♥♥♥♥의 심의 절차 등 PB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상품제안서는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 마케팅 목적으로 사모펀드의 구조 및 특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는 이를 ‘판매보조자료’로 보고 있음(대판 2012다7199)

- 집합투자규약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운용사의 상품제안서에만 기대어 투자권유가 이루어지고, 상품의 장점 위주의 특징만 기재된 상품 교육자료\*가 별다른 통제 없이 PB들에게 제공됨에 따라 PB들은 ☆☆ CI 펀드를 “정기예금 만크이나” 안정적인 상품으로 인식\*\*한 채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투자권유하는 등 영업점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실무자가 상품제안서 내용 중 상품판매에 도움이 될만한 ‘투자 하이라이트’만 발췌하여 제작하고, PB게시판 등에 게재

\*\* 현장검사 기간중 실시한 판매직원 면담에 따르면, 실제 판매한 △△팀장(xx명)들은 판매 당시 ☆☆ CI펀드를 ‘100%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위험이 없는 준확정금리성 상품’으로 투자권유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전체 xx개 ☼☼☼센터 중 판매량 상위 xx개 센터 △△팀장들도 상품 특징에 관해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인지하였던 것으로 진술



## 관계 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 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은행검사1국
연락처	02-2100-2892	02-3145-7062